정개특위 '개점휴업' 총선 차질 빚나

선거구 획정·석패율제 등 해결 현안 산적

분구·합구지역 국회의원·원외위원장 불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단독처리의 여파로 장기간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내년 총선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정개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지난 10월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외국민선거 관련법을 처리한 이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정기국회가 열린 지난 3개월 동안 한미 FTA 등 주요 쟁점을 논의에 집중하느라 단 한차례의 회의만 열린 셈이다.

또 정개특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동안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한미 FTA 비준안을 여당이 날치기 처리하면서 전격 취소됐다.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것. 정개특위가 처리해야 할 주요 쟁점은 ▲선거구 획정 ▲석패율제 도입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당선무효 관련 후보자 가족 범위 조정 ▲지구당 부활 ▲중앙당 후원회 허용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정치자금 공영제 등이다.

대부분 총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여야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총선 입지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사안들이다.

특히 선거구 획정은 총선 예비출마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자신이 노리는 지역구가 분구 또는 합구가 되는지 또 나아가 그 과정에서 기존 지역구에 변동이 있는지 등은 출마 희망자에게는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이와 관련,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8개 지역구 분할, 5개 지역구 통합'을 핵심으로 하는 획정안을 마련해 정개특위에 보고했지만, 정개특위는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의 1차 시점은 지역구별 선거비용을 확정해 공고하는 날인 지난 3일이었고, 2차 시점은 예비후보 등록일인 13일이지만 이날까지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선거구 획정위의 보고안은 강제성을 띠지 못해 정개특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나 여야 모두 입장차가 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부터 정개특위가 열린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 확실시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구·합구 대상 지역 국회의원이나 원외위원장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획정위가 합구 대상으로 보고한 여수의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역에서는 관심이 지대하다"며 "예비후보 등록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선거구를 획정해야 향후 정치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등원할 계획이 없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완강해 당분간 공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에서의 정치개혁은 물건너간 만큼 내년 1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檢 "대북송금 박지원 재수사 불가"

핵심인물 김영완 최근 조사… 3000만달러 추적

검찰이 해외로 도피했던 대북송금 사건 핵심인물 김영완(58)씨를 최근 조사함에 따라 2000년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 중수부(최재경 검사장)는 그러나 무기중개상인 김씨가 현대그룹 비자금으로 조성된 150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전달했다는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수부 관계자는 2일 "박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사안으로 다시 수사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쪽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다"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권노갑 전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김씨 본인은 수사하고 기소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지만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현대그룹 비자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고(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김씨를 통해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측에 전달하려고 했던 미화 3000만달러의 행방을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3년 3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8년9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귀국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조사를 받은 직후 다시 출국했으며 검찰은 필요할 경우 재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박지원 의원 측은 "수사 시작부터 표적수사였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수사가 될 수 없는 사안이다. 야당의 유력한 당권 후보 죽이기"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통합진보정당 하나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와 민노당 이정희 대표 등 통합진보정당 대표들이 4일 서울시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참여당 임시 전국당원대회에서 통합투표결과를 발표하기 전 손을 잡고 지지자의 환호에 답변하고 있다. 참여당은 이날 전대를 열어 통합에 대한 내부 승인 받아 참여 절차에 종지부를 찍었다. 왼쪽부터 통합연대 노회찬 공동대표, 민노당 이정희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통합연대 심상정 공동대표, 국민참여당 이재정 전 대표. /연합뉴스

'최루탄 김선동'의원 민노 원내부대표에

박희태 "고발계획 없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사법당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고발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그동안 보수 진영으로부터 김 의원을 고발하라는 압력을 받아왔으나, 예산 국회가 정상화되려면 비준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야당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했고, 보수단체들이 사법당국에 고발한 만큼 의장이 나서서 고발하는 것은 법적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 상황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선동 의원은 이날 민주노동당의 신임 원내부대표에 선출됐다. 민노당은 의원단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와 원내부대표로 각각 강기갑 의원과 김선동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새로 선출된 원내지도부는 민노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추진하는 통합진보정당의 원내지도부로 승계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하늘 판사, FTA 청원문 작성 착수

판사 170여명 동의… 법원장들 우려 표명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법부가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현직 부장판사가 청원문 작성에 착수했다.

김하늘(43·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다시 글을 올려 "이렇게 빨리, 많은 판사가 공감할 줄 정말 몰랐다. 너무 감동적이고 가슴이 벅차다"며 "오늘 5시가 지나면 내 제안에 동의한 판사들의 이름을 정리해 청원문을 작성하도록 하겠다. 대법원에 연락해 대법원장을 만날 수 있는 일정이 마련되는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그의 글에 동의해 댓글을 남긴 판사들은 1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반대글을 올려 논란을 촉발시켰던 최은배(44·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이정렬(42·2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MBC와 CBS 라디오 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소신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들은 방송에서 FTA 재협상을 위한 TF 구성을 요청하는 글에 대해 동조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진중한 자세로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고 밝혀 법관들의 잇단 공개 발언에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들도 "외부로의 의견 노출이 법원을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손학규 "SNS 심의 시대착오적 행태"

방통위 전담조직 신설에 강력 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한 데 대해 비난이 커지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SNS를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지상파 라디오 심의팀, 종합편성채널을 심의하는 방송심의 2팀이 신설됐다.

방통심의위는 "직제 개편은 위원회 기능과 역할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심의와 통신심의 관련 부서를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조직개편 방안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SNS 이용자들과 언론·시민 단체들로부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거센 반발을 받아왔다. 사실상의 검열 조직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여권 내에서도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권 위원들은 "박만 위원장이 충분한 논의 없이 표결을 강행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퇴장했고, 여당 추천 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일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앱(애플리케이션)과 SNS 통제 전담팀 신설을 날치기 강행처리했다"며 "도대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명박 정권은 '나 독재정권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광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사건번호	피 고 인	사건명
2011고단 2231	유한회사 부국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2236	유한회사 남양운수 (상호변경전 : (유)전북통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2241	대한통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2247	대한통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2254	대한통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2319	남경화물운수 유한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2325	경동화물자동차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2415	삼우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2420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2429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2432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2439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2446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2453	유한회사 담양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2486	남경화물운수 유한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2490	광주합동경동택배물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2516	남경화물운수 유한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2525	대한통운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2535	유한회사 새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2549	유한회사 코리아통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2630	우성트레일러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2636	유한회사 연안통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2643	유한회사 신성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2693	유한회사 연안화물	도로법위반
2011고단 2699	유한회사 제일특수화물	도로법위반
2011고단 2707	유한회사 무등통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2716	유한회사 무등통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2724	유한회사 무등통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2731	고려특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2738	고려특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2742	고려특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2749	주식회사 코리아물류	도로법위반
2011고단 2751	주식회사 현대상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2759	주식회사 월포	도로법위반
2011고단 2767	유한회사 제일특수화물	도로법위반
2011고단 2775	유한회사 무등통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2782	유한회사 무등통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2789	유한회사 무등통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2797	주식회사 고려특운	도로법위반
2011고단 2806	고려특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2833	유한회사 보성물류	도로법위반
2011고단 2845	유한회사 새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2853	남선화물자동차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2886	주식회사 연안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2892	나라운수 유한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2898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2905	나라운수 유한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2913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2922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2930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2937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2972	문성훈	도로법위반
2011고단 2979	대한통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2987	대한통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2996	대한통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3003	대한통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3007	대한통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3011	대한통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3015	고려특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3060	대신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3066	고려특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3074	고려특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3083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3091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3098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3105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3107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3169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3175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3183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3190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3197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3204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3212	금원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3221	주식회사 금화로지스틱	도로법위반
2011고단 3229	광주합동경동택배물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3236	유한회사 보성물류	도로법위반
2011고단 3243	주식회사 로텍스	도로법위반
2011고단 3251	남선화물자동차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3266	주식회사 남선화물	도로법위반
2011고단 3275	씨.에스.티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3283	대한통운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3290	금원운수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3300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3305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3312	유한회사 연안화물	도로법위반
2011고단 3328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3336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3343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3350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3358	주식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3368	주식회사 연안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3376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3384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3391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3398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3406	유한회사 나라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3417	주식회사 동보운수	도로법위반
2011고단 3431	유한회사 신성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1고단 3436	유한회사 현대상운	도로법위반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1년 11월 23일

판 사 안 상 원

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시달리는 분 (빙의.신병)
♣ 우울증 / 불안 / 대인 공포증
♣ 환청이 들리시는 분
♣ 불면증 / 학습증진
♣ 기억력 회복 / 주벽이 심하신 분
♣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신 분
최면요법으로 확실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최면요법으로 빙의퇴치 등등 배우실분
무등산 길상사 주지 법공
문의 062-228-6606 , 010-3747-6606

경매투자
◆ 경매 배우면서 일하실 분
◆ 20년 경매비법 노하우 전수
◆ 유치권등 특수물건만 전문 투자
◆ 공동으로 경매에 투자 하실 분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 · 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 KB시세~80%+α (60%) 금리 :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 보증금의~80% 금리 :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부 제 540호)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정보관리 철저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 ~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적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 월1.2%~3%
국민금융 (대부 제 642호)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